

국회 정상화 또 '불발'... 국민 바람 외면

文의장, 5당 대표 불러 중재 나섰지만 '무용지물' 민주-조건없는 개원 vs 한국-특검 등 수용해야

여야 간 이견으로 국회가 공전 중인 가운데 19일 문희상 의장이 정상화를 위해 직접 나섰지만 결국 무위로 그치고 말았다. 문 의장은 이날 오전 11시 국회 의장 집무실에서 여야 5당 원내대표들과 만나 정상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지만 전날과 마찬가지로 각 당의 이견이 첨예해 접점을 찾지 못했다. 이계성 국회 대변인은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문 의장이 여야 5당 원내대표를 소집해 2월 임시국회 정상화 문제를 논의했지만 각 당의 입장을 개진하고 합의점을 찾지 못해서 결론을 내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에 따르면 문 의장은 회동에서 "2월 임시국회는 즉시 열려야 한다. 그래서 민생법안이나 개혁법안을 빨리 처리해야 한다. 그게 국민들의 간절한 바람"이라며 "안 되면 3월 국회 일정이라도 합의해 발표하게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전했다. 원내대표들은 전반적으로 국회를 빨리 열어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었던 것으로 확

인했다. 다만,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2월 국회 소집을 위한 최소한의 명분이 충족돼야 열 수 있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나머지 정당 원내대표들은 각 당의 입장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열어놓고 논의하는 게 국회의 기능 아니냐는 입장이었다고 이 대변인은 전했다. 문 의장은 원내대표들을 향해 "양보할 것은 양보해서 결론을 끌어내는 게 좋다"는 중재안을 전했다. 이견은 끝내 좁혀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러한 상황을 증명하듯 이날 회동 중 의장의 앞에서 대기 중인 취재진들에게는 이따금씩 문 의장의 고성 소리가 들리기도 했다. 문 의장이 여야 원내대표들을 향해 "내내 싸움만 한다" "뭐하는 건가 지금. 사법개혁, 국가 권력기관 개혁이 됐다" "그러니까 5·18 같은 일이 생기는 것이다. 부끄럽지 않나"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변인은 이에 대해 "각 당 의견이 엇



문희상 국회의장과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의장 주재 5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갈리고 공방이 있자, 국민들은 국회가 열릴 길 간절히 바라는데 그런 논쟁만하고 있을 수 있냐고 지적하며 강하게 정상화를 말씀하면서 목소리가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드릴 말씀이 없다"면서도 "여당이 책임 있게 (요구안에 대한 답을) 내놓으면 되겠다. 추가로 만나 논의를 계속하자고 했다. 조금 기다려 달라"고 말했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나 원내대표에

게 "우리끼리 합의가 안 되니까 우선 당 수석부대표들끼리 논의하게 하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한편, 한국당은 국회 정상화의 조건으로 김태우 수사관 사건 조사를 위한 특별검사 도입, 손혜원 의원 목포 부동산 투기 국정조사,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 사퇴 등을 요구한 상황이다. 반면 민주당은 조건 없는 국회 정상화를 강조하며 한국당의 요구를 일축한 상태다.

"5·18 정쟁 사안 아냐... 광주에 상처 안돼"

이해찬, 선거제 개편은 '패스트트랙' 지정 필요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19일 자유한국당 일각의 5·18 폄하 발언과 관련해 "5·18이라는 큰 아픔은 정쟁으로 이어갈 사안이 아니다. 역사적 규정이 끝난 사안에 대해 근거 없는 주장을 해서 광주 시민에게 상처 입히는 일이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논의가 표류 중인 선거제 개편과 관련해 "한국당이 강력하게 반대하면 법안 처리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공조해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을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법정 구속된 김경수 지사에 대해서는 "현역 지사이고 임기가 남아있기 때문에 재판을 진행하더라도 불구속으로 진행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한국당 전당대회 과정에서 5·18에 관해 아주 크게 폄하하는 발언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며 "정말로 그러지 않길 바란다"고 거듭 촉구했다.



5·18 유공자이기도 한 이 대표는 여러 정치인들이 다수 포함된 '5·18 유공자명단'이 온라인상에서 확산하고, 이들이 과도한 혜택을 받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정치인 중에는 (5·18 유공자가) 많지 않다. 우리 당에서는 저와 설훈·민병두 의원뿐"이라고 확인했다. 이 대표는 2월 임시국회 정상화도 촉구했다. 그는 "2월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임시국회가 아직도 소집되지 않고 있는 것이 대단히 유감스럽다"며 "2월 국회는 국회법에 규정된 의무사항이다. 자동적으로 열려야 하는데 (한국당이) 합당하지 않은 조건을 내세워 응하지 않고 있어 유감스럽다"고 했다. 이어 "유치원 3법, 소상공인법 등 민생법안, 검경수사권 조정 등 권력기관 개혁, 탄력근로제 확대 등 노동현안, 선거제 등을 2월 국회에서 처리돼야 내년 선거에 대비할 수 있고, 민생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지원 "지만원 선거 도왔지만 DJ가 멀리해"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은 19일 '극우논객' 지만원씨가 과거 군사전문가로서 김대중 전 대통령에게 인제로 영입된 바 있다는 보도에 대한 해명에 나섰다. 박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지씨가 김 대통령 후보를 도운 것은 사실"이라며 "지씨의 언행을 살펴본 김 대통령은 흡족하게 생각하지 않고 약간 멀리했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제가 (지씨를) 많이 만났다.



당시 박태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친구여서 용역을 줬다는 말은 들었지만 확인은 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어떻게 됐는지 씨가 무슨 장관을, 어떤 직책을 보장받거나 제의받은 사실은 없다는 것을 밝힌다. 오해 없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서울=김현수기자 cr-2002@srb.co.kr

평화당 '5·18모독 방지법' 당론 채택

정동영 "허위사실 유포는 반드시 처벌" 장병완 "한국당, 5·18비방 의원들 비호"

민주평화당이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공조기로 한 '5·18 특별법 일부개정안'의 처리를 당론으로 채택해 추진기로 했다. 개정안은 최근 5·18 왜곡발언 사태의 재발방지를 위해 5·18을 모독하고 폄하한 자들을 처벌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평화당 지도부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국회 차원의 '5·18 왜곡발언' 한국당 의원 징계를 거듭 촉구하며 이 같이 강조했다. 정동영 대표는 "5·18을 모독하고 폄하한 한국당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들이 엄정하게 심판할 것으로 보고 있다"며 "이것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5·18 비방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한 우리 당의 당론추진법, '5·18 특별법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국민적 의견을 모아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장병완 원내대표는 왜곡발언 3인방에 대한 한국당의 징계가 미흡함을 지적하며 국회 차원의 징계 필요성을 재차 주장했다. 장 원내대표는 "한국당이 아직도 5·18 망언 의원들을 비호하면서 '당헌당규에 따라 처리했다', '5·18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라'며 적반하장 격으로 나오고 있다"



19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평화당 의원총회 및 제5차 5·18 역사왜곡대책특별위원회 연석회의에서 정동영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고 운을 뗐다. 그는 그러면서 "어제 국회 윤리위에서도 징계는 상정 자체가 결렬됐다"며 "민주당과 한국당이 서로 자신의 입장만 고수하면서 국회가 제 역할을 방치하고 있다는 국민들의 질타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장 원내대표는 "20대 국회 들어 의원 징계안이 26건이나 제출됐음에도 윤리위는 아직까지 한 건도 처리하지 못했다"며 "지금이야말로 국회 윤리위가 신속하고 엄격한 결정을 내려 국회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해소시켜야 할 시점"이라고 전했다.

장 원내대표는 "특히 5·18을 모독하고 반민주·반헌법적 망언을 한 한국당 망언 의원들의 징계가 그 무엇보다도 시급하다"며 "민주당과 한국당 양당은 당리당략을 계산하지 말고 국회윤리위를 신속히 정상화시켜 징계안을 처리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윤소하 "정의당, 세비 인상분 국고 반납"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는 19일 지난해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올해 예산안을 '밀실' 합치면서 국회의원 세비를 1.8% 인상한 것과 관련해 "정의당은 세비 인상분을 국고로 반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회의원 수당에 관한 국회 운영규정 부칙이 개정됐다. 결국 올해 의원 세비는 전년보다 1.8% 오르게 됐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정의당은 국회의원 세비 동결을 주장해왔다. 그리고 국회의장에게 각 당 원내대표들을 만나 예산을 동결해줄 것을 요구한 바 있다"며 "의장은 그러한 의사를 피력한 것으로 알고 있으나, 결국 동의를 되지



않아 세비가 인상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016년 고 노회찬 원내대표는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회의원 세비를 절반으로 낮출 것을 제안했다"며 "정의당은 '국민의 신뢰 회복을 통한 정치개혁'이라는 노회찬의 뜻을 이어가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또 "국회의원 세비를 스스로 정하는 '셀프 인상'도 막겠다"며 "전원 외부 인사로 구성된 국회의원 보수산정위원회에서의 세비 산정하도록 할 것이다. 국회의 신뢰를 높이고 정치개혁을 이끌겠다"고 다짐했다.

가족을 위한 알뜰 정보 SMART LIFE

사랑방

JOB

부동산

CAR

원룸

장터

나주혁신도시

맛집

BUS